

2018년 초점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속

■ 개요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외교·안보 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각오로 출범했다. 그러나 2017년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과 한 차례 핵실험 감행으로 적잖은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상황 반전은 2018년에만 세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이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물꼬를 튼 남북 해빙무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높이 들고 있다.

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만남이었던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두 정상은 첫 회담에서 3개 장 13개 조항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불리는 이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도 합의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한 해에 두 차례 이상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토대를 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대좌를 앞두고 북미가 상대를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희박했을 때 전격적으로 열린 제2차 5·26 남북정상회담은 꺼져 가던 비핵화 불씨를 다시 살렸다.

무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북미정상회담이 기사회생하자 남북 정상 간 소통이 주효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상외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북 정상의 이러한 노력은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키는 발판이 됐다.

4·27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원칙에 합의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세 번째 회담인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에 합의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또 한반도 전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기로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담긴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청와대는 "실질적 종전을 선언했다."고 자평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 극적인 반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2018년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남북관계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며 한 달 뒤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두고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튿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파견과 당국회담 뜻을 밝힌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 데 본격 시동을 걸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1월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고위급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등이 방남하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여는 데 합의했다. 북측은 평창동계올림픽에 고위급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보내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과 고위급·실무회담도 잇따라 열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협의가 속개 빠르게 이어졌다.

■ 남북 평화 징검다리 된 평창동계올림픽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이 1월 29일 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이 취하는 진정한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전통문과 함께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위기를 맞는 듯했다. 이는 남북이 합의한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 공동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해프닝에 그쳤다.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이 차례로 방남했다. 북한의 참가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이 현실화했다.

개막식 이틀 전인 2월 7일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고위급대표단 파견 방침을 밝히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2월 9일 처음으로 방남한 김 제1부부장은 개막식에 참석한 뒤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 2월 10일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B조 조별리그 1차전 남북단일팀과 스위스의 경기 끝난 뒤 영부인 김정숙 여사(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친사와 함께 방북 요청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올림픽 기간에는 개최식 공동입장은 물론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남북 응원단 공동응원, 북한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 공연 등이 이어지면서 달라진 남북관계를 보여줬다.

폐회식에는 북한 ‘대남총책’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이 고위급대표단으로 재차 파견됐다. 김 부위원장은 폐회식 참석 직전 문 대통령을 만나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폐회식 후에도 이틀을 더 남측에 머무르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과 긴밀한 협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김 부위원장이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물이라며 국민에게 대승적 이해를 요청했다.

■ 대북 특사단 파견...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미대화 중재 및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파견으로 이어졌다. 수석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의 특사단은 3월 5일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착 3시간여 만에 특사단을 만나고 만찬을 포함해 4시간 넘게 환대했다.

이튿날 귀환한 정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4월 말에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핫라인을 설치해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한다는 발표도 나왔다. 북한은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남측을 향한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3월 9일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에 앉혔다.

남북은 3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 날짜를 4월 27일로 정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확정한 것이었다. 남북은 4월 5일부터 2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의전·경호·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하고 세부 일정까지 합의했다.

'세계의 뉴스'에 내외신의 관심이 컸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는 회담 하루 전까지 36개국, 360개 언론사에서 2천 962명의 언론인이 취재를 신청했다. 사전 취재 신청 기준(2천 850명)으로 내신이 176개 언론사 1천981명이었고, 외신도 184개 언론사에서 869명이 MPC를 찾았다.

■ 남북 정상,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 악수

4월 27일 오전 8시6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으로 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새벽에 출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전 6시31분 보도했다. 남북 정사는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오전 9시28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 나타난 김 위원장은 걸어서 계단을 내려와 MDL에 걸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와 T3 사이를 통해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기다리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마주하고 환하게 웃으며 잠시 대화를 나눈 뒤 9시29분 손을 맞잡았다.

이후 문 대통령이 손짓으로 안내하자 김 위원장은 MDL을 넘어 월경. 판문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남북 정상이 MDL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 것 역시 최초였다. 촬영 후에는 김 위원장이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남북을 바라보며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게 손짓으로 북측에 넘어가 사진을 찍자는 제스처를 취했고, 두 정사는 손잡고 북측으로 이동해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다.

■ 확대회담 이어 '도보다리' 단독회담…한반도 평화 새 출발 선언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두 정사는 오전 10시15분부터 100분간 회담했다. 여기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만 배석했다. 오후에는 도보다리를 산책하면서 30분간 배석자 없이 사실상 '단독 회담'을 했다. '도보다리' 회담은 '한 편의 무성영화'라는 평가를 받으며 4·27 남북정상회담을 상징하는 명 장면으로 남았다.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와 군사적 충돌방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비핵화 등 불안정한 평화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를 싹 틔우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이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선언에는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회담에서 비핵화 노력에 합의한 것은 1992년 1월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후 26년 만이었다.

다양한 당국회담 개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 8·15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등도 주요 합의 내용이였다.

남북 정상 간 합의는 한반도에 겹겹이 쌓인 분단과 대결 잔재를 밀어내고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판문점 선언 속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남북 정사의 강력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망을 밝게 했다.

4·27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상호 교류 활성화 등 남북 관계 개선

- 1 민족자주 원칙 확인. 상호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 열기로
- 2 고위급 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정상회담 합의 문제 실천에 노력
- 3 당국간 협의와 민간교류 협력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 4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 교류 양대 등 활성화. 민족공동행사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 5 적십자회담, 이산가족상봉 (오는 8월15일) 문제 협의·해결
- 6 10·4 선언 합의 사업 추진. 경의선철도·도로 연결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실질적 해소

- 1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금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
- 2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어로 활동 보장
- 3 국방부장관회담, 군사당국자회담 자주 개최.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1 어떠한 무력도 상호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 재확인과 엄격한 준수
- 2 군사긴장 해소와 신뢰가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 군축 실현
- 3 올해 중선 선언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적극 추진
- 4 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적극 노력. 문재인 대통령, 올해 가을 평양 방문

연말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위에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소나무 기념식수에서는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고 식수 후에는 김 위원장이 한강수를, 문 대통령은 대동강 물을 골고루 뿌렸다. ‘함도함수’가 이뤄진 것이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만찬과 식수는 대립과 반목의 고리를 끊고 화해와 화합으로 나아가려는 양측의 의지를 보여줬다.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까지 참석한 만찬에는 다양한 상징 음식이 나왔다. 평양 옥류관에서 파견된 요리사가 만든 평양냉면과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신안 가거도의 민어해삼편수,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의 유기농 쌀밥, 문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부산의 달고기구이 등으로 화합의 식탁을 채웠다.

문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다.”며 “이제 이 강토에 사는 그 누구도 전쟁으로 인한 불행を 겪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한이 힘을 합쳐 평화를 지켜나가자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답사에서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지키고,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만들어나기 위한 나와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으면 그 어떤 도전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꼭 보여주고 싶으며, 또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5·26 남북정상회담

■ 급랭한 북미대화…문 대통령-김 위원장 전격 회담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길을 텃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월 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만족한 합의’에 이르렀고,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귀국길에 선물을 제공했다. 억류해 온 미국인 3명을 석방한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훈풍이 돌던 북미관계에 돌연 변수가 나타났다. 맥스선더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문제 삼아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전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 회담과 직통 전화로 수시로 논의하겠다.”고 말해 선언의 이행 상황을 남북 정상이 직접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도 회담에서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이런 만남을 갖고도 좋은 결과에 기대를 품은 분들에게 낙심을 주지 않겠다.”라며 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서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정상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커다란 성과다.

■ 기념식수부터 ‘평양냉면 만찬’까지 화제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은 4·27 회담 당일 오후 기념식수와 환영 만찬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격적으로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해법'을 거론해 북한을 자극했다.

문 대통령은 5월 22일 미국 워싱턴DC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간 냉기류를 없애는 데 공을 들였다. 한미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미 간 실질적 비핵화 합의까지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면서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 순항을 예상했다.

그러나 북미 간 '말뚝탄 주고받기'는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틀 만인 24일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상황이 견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북미는 한 발짝씩 물러났다. 북한은 25일 김계관 외무성 제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보다 극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하면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회담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만 배석했다.

■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루 뒤인 5월 27일 청와대 춘추관을 직접 찾아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하면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하면서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데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최고 영도자께서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반도의 가장 큰 현안의 두 축이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데 양 정상이 공감한 것이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정을 보장한다는 미국의 조치를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를 표했다. 결국 5·26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향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안보 우려 해소라는 두 핵심의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중요 과제로 부상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논의는 두 의제를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북...평양 남북정상회담

■ 9월 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 확정

남북은 8월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세 번째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었다. 회담은 그보다 나흘 전인 9일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해 성사됐다.

당시 북미는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판을 깨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기 싸움은 치열했다. 신뢰를 쌓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신고 및 사찰과 종전선언을 상대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형국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힌 것은 '툭다운' 방식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남북은 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9월 5일 다시 한번 정외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을 파견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김 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측과 같은 달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로 전환해 정상회담에 대비했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틀 전에는 공식수행원 14명과 특별수행원 52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포함됐고 정당 대표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동행하게 됐다.



5·26 2차 남북정상회담 주요 내용

▶ 북미정상회담 관련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

▶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 재확인

6월1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및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 약속

▶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 있다고 평가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 세 번째로 평양 땅 밟은 한국 대통령

9월 18일 오전 8시48분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직항로로 이동해 오전 9시49분께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평양 방문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트랩 앞까지 나가 문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후 3시45분부터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1일 차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한국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첫날 회담을 마친 남북 정상은 평양 대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뒤 북한 고위 간부와 외국 주요 인사 전용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환영 만찬을 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리 여사와 옥류 아동병원에 동행하는 등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정치·경제계 인사들로 구성된 수행단도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특별수행단 일부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경제인과 공기업 대표들은 리룡남 내각 부총리를 만났다.

■ 남북 정상, 평양공동선언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19일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진행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합의문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내용도 포함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

역에서의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채택,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을 합의했다. 2018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는 한편,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4월 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이 그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평양 대동강 수산물식당'에서 만찬을 한 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를 관람했다. 집단체조가 끝나자 김 위원장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15만 평양시민 앞에 문 대통령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면서 "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평양시민으로부터 열렬한 함성과 박수를 받았다.

■ 남북 정상 백두산 동반 등정…문 대통령, 귀환 즉시 대국민 보고



▲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방문해 천지에 손을 담가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마지막 날인 9월 20일 남북 정상은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남북 정상 내외가 민족의 영산으로 평가받는 백두산 천지를 동반 산책한 것은 4·27 회담 때 도보다리 대화와 마찬가지로 큰 상징성을 띤 역사의 명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찬을 마친 뒤 오후 3시30분 삼지연공항을 떠난 문 대통령은 2시간여 뒤인 오후 5시36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문 대통령은 귀환 직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 약속했다."며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폐기, 영

9월 평양공동선언 주요 내용

- 상호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추진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화소 개소
- 10월 중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
-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
-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 미국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추진
-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연말뉴스

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중요한 큰 걸음"이라며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급적 종전선언이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 뒤흔든 '미투'... 성폭력 끝내고 성평등 시작으로

■ 법조계서 촉발한 미투, 문화계 넘어 정치권까지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창원지검 통영지청)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과거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면서 국내에 '미투(Me too · 나도 당했다)' 운동이 본격화했다.

서 검사는 게시 글에서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metoo' 해시태그를 달았다. 같은 날 저녁에는 TV방송 뉴스에 공개 출연해 파급력을 보였다. 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은 2007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제안했고, 2017년 미국 영화계에서 유명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폭로로 점화했다.

국내 미투 운동도 문화계에서 먼저 번졌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문화계의 거목이었던 고은 시인이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극계 대부로 불리던 이운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도 단원들에게 상습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조재현, 오달수, 김생민 등 왕성히 활동하던 연예인도 미투 지목을 받고 대중 앞에서 얼굴을 감췄다. 배우 조민기가 제자들로부터 미투 폭로를 받은 후 경찰 출석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위계 관계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을 주로 고발한 미투의 화살은 정치인까지 겨냥했다. 유력 대권주자로 꼽힌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수행비서가 3월 5일 방송 뉴스에 나와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월 10일 미투 폭로가 나온 직후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나중에 철회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미투 지목을 받고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았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유명인을 향한 미투가 주목받는 사이에 대학교수를 겨냥한 대학 재학생 · 졸업생의 미투도 잇따랐다. 성폭력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교수들은 강단을 떠났다. 4월부터는 학교 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스쿨 미투'도 본격화했다.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은 창문에 'metoo' 모양으로 접착식메모지(포스트잇)를 이어 붙여 스쿨 미투를 촉발했다.

일반 시민도 SNS에서 성폭력 경험을 익명로나마 폭로하면서 위로와 지지를 주고받았다. 미투 폭로자들에게 '위드유(#withyou · 당신과 함께)' 해시태그로 지지를 표하는 움직임도 일었다.



▲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 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부라부라' 대책 내용은 각계...대법 "성범죄 다룰 때 '성인지감수성' 갖춰야"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 검찰은 조직된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80여 일간 조사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 검사 성추행이 사실로 확인되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할 수 없다면서 인사 보복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성폭력 혐의를 받은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도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에 성비위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법무부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이자 성폭력 문제 활동가인 권인숙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는 법무부·검찰 및 산하기관 내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범죄 피해 경험을 전수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7천407명 중 61.6%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 검사가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응답 비중이 70.6%로 높았고, 의도적인 신체 접촉 피해 경험도 응답자의 22.1%에 달했다.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에서 배제하라고 문체부에 주문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권고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도 미투 운동의 파도를 겪으면서 각자 성폭력·성차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4월 12일 대법원은 여학생 성희롱으로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내면서 "성범죄 사건을 판단할 때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고 적시했다.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최초 판결로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하지 따질 때 성범죄의 특수성, 특히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안에서의 피해자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